

광주·전남 통합 이제는 국회의 시간... 호남 정치력 시험대

국회 심의 본격화 핵심특례 반영 촉각
대통령 의지 불구 정부부처 '딴지 걸기'
지역 국회의원·단체장 정치력 발휘 의문

지역의 명운을 가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조항에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며 비판 일색이다. 40년 만의 통합 기대감으로 금물살을 타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전남광주특별자치 특별법'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존재감이 떨어진 '호남 정치력'이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에 대한 심의를 갖고 의결했다.

논의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발목이 잡혔다.

당초 특별법안에 있던 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의 핵심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용된 조항마저 상당 부분 수정됐다.

이대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말 그대로 빈껍데기뿐인 행정통합, 실익 없는 광주·전남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을 추진해 온 단체장들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처럼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정부 부처의 기득권 지키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광주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정·권한의 이양에 관한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내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광주와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



김민석(앞줄 왼쪽네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영록(앞줄 오른쪽 세 번째) 전남지사와 강기정(앞줄 왼쪽 세 번째) 광주시장, 광주·전남 지역구의원들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도권 일극체제 대응,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핵심특례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우선반영 특례 31건을 제시했다.

국고보조금 비율 상향,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광역교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재정 지원 등이 골자다.

각론으로 들어가 대통령이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지원' 등 재정지원 조항의 명문화, 지역 전략산업인 에너지·인공지능(AI) 관련 특례, 통합특별자치회 의원 정수와 원 구성에 관한 특례 등의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입장에는 변화의 기미가 없다. 특별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는 않겠다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요지부동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민주당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이 지방분권 대진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재정지원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 없고,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심의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증인데, 호남의 정치력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조선이어서 국회 내 존재감이 미미한 데다, 당 지도부를 움직일 만한 강력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수차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22대 총선 직후 우려됐던 '호남 정치력의 한계'가 절체절명의 시점에 여지없이 불거지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벽을 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

다간 행정통합의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질차상 주민 설득에 앞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확고히 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지만 앞뒤가 바뀐 측면도 있다. 통합의 열매만 보고 달려온 속도전의 맹점이기도 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통합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통합에 수반되는 행정 조직과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한 설명이다.

시기도 시기지만 알맹이 빠진 특별법으로는 통합특별자치의 실질적인 기능과 혜택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생존전략인 5곡 3특 구상이 단순히 구호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기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뉴시스

“광주시 해체형 통합 안 돼 주권 상실·대도시 경쟁력 약화”

국회 심의 중인 전남광주특별자치 통합특별법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주권 위배, 대도시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광주시' 해체형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남·광주 통합 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민모임은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 통합특별법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광주시'라는 독립적 행정주체를 해체하는 방식의 통합이 초래할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헌법 질서와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자 의견서를 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의견서에서 통합특별법을 통해 광주시가 해체되면 전남 타 도시와는 다르게 광주시민만 도시 행정 책임지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상실,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해체가 주민이 선출한 행정주체 자체를 소멸시키는 중대한 지위 변경인 만큼, 주민 투표 없는 입법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통합특별법시정 1명이 동시에 광주와 전남의 행정, 광역 전략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초집권 구조는 권력 과잉과 행정 목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광주시 해체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대도시 국제 경쟁력 약화도 문제 삼았다. 해외 도시와의 직접 교류 주체 상실, 국제 행사·투자 유치에서 도시 브랜드 약화, 문화·첨단산업 정책 자율성 축소 등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5·18민주화운동, 광주 학생독립운동을 통해 인권·민주·평화의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한 광주의 정체성 약화도 지적했다.

대도시 행정주체를 강화하는 수도권과 달리, 통합 명분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광주·대구·대전을 해체하면 오히려 정부의 '5곡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대안으로서 '통합특별법+광주 통합자치시(또는 특별시)·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유지'를 제시했다. 특별시는 초광역 전략 정부로서 가능하고 광주는 대도시 행정주체의 지위를 존치하되, 시·군 단위 기초자치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해체형 통합은 분열과 갈등, 위헌 소송, 도시 쇠락기 운동, 정치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광주시 존치' 의견을 공식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광주·전남 교육감선거 '통합 변수'... 단일화·합종연횡 전망

행정통합시 특별시교육감 1명만 선출
선거권 확대·공약·예산 증가 '발등의 불'
불출마, 단일화·후보간 연대 이어질 듯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특별법 통과를 예의 주시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선거권역이 광주·전남 전체로 확대되지만 6월3일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현실적 제약으로 불출마나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가 2월 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특별시교육감 1명만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예비후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선거권역이 두 배 늘어난 데다 대도시권인 광주와 농어촌권인 전남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선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선거비용과 조직 구성은 현실적인 문제다. 15%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수 있어 불출마나 합종연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블랙홀이 된 행정통합으로 전남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문순태 전 순천대 부총장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지지를 선언했다.

광주에서는 이정선 현 광주시교육감과 광주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정한 정성훈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6월 지방선거 등판을 준비 중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자치 변화를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서 설명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남지역으로까지 행정통합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추대된 정 전 지부장은 "통합의 시대, 전남의 교육 주체들과 손잡고 더 넓은 연대, 더 큰 교육자치 공동체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에서는 김대중 현 전남도교육감과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태모 전 한국교총 부회장 등 6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재선을 준비 중인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 통합과 관련한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강 전 장학관은 최초 여성교육감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가 책임교육, 인성교육 강화, 교권 재확립, 인공지능시대 디지털 시민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등 공약을 내걸었다.

20년 간 목포대에서 후학을 양성해 온 고 교수는 경제학자의 경험을 살려 지역 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다. 보편적 교육복지, 인공지능 시대 인재 양성, 학교 공동체 활성화, 지자체 협력 평생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내걸고 있다.

김 전 교육장은 공교육의 기본 역할을 강조하며 학생 중심 교육,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작은학교 디지털·생태·인권 등 미래교육 거점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전 지부장은 전교조 전국 정책실장으로 학교 민주화·학생 인권보장 정책을 주도해 온 경험이 있다. 경쟁과 차별을 뛰어넘어 협력과 지원으로 지역 교육을 미래 혁신교육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거문중학교 교장 출신인 최 전 부회장은 정통과 교육 전문기업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와 교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시류에 편승하기보다 교육의 기본기에 충실하며 지역교육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교육장과 장 전 지부장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전남도민공천위원회의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민공천위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단일 후보인 정성훈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최종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뉴시스

Self 장어명가 청산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